경찰, 라임·옵티머스 관련 충장OB파 주시

조직 활동 전력있는 김봉현 회장 필요할 때마다 조직원 활용 라임·옵티머스 행사 등 동원···국제PJ파도 옵티머스와 얽혀 광주 조폭들 수도권으로 활동무대 옮겨 금융사기 등 손 뻗쳐

광주경찰과 검찰은 라임·옵티머스 금융사

기 발생 전후로 충장OB파 움직임을 예의

'국제PJ'파도 '옵티머스'에 얽혀있다.

국제PJ파부두목인조규석(61)은옵티머

스 막후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로 알려져

이 과정에서 조씨는 지난 2018년 선박

부품업체인 해덕파워웨이 인수를 주도한

옵티머스의 전 고문 박모(57)씨에게 수십

억원을 빌려줬다가 제때 갚지 않는다며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조 2000억원 대 금융사기사건에서 출 발해 정치권을 들썩이고 있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 광주지역 경찰이 조직폭력배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 다. 정·관계 로비 의혹에 광주를 본거지로 하는 전국구 폭력조직인 충장OB와 국제 PJ파 이름이 오르내리면서다.

광주지역 폭력조직 담당 경찰들 주변에 서는 일찌감치 수도권 등으로 활동구역을 옮겨 보험사기, 주식·펀드 사기 등으로 '업종 변경'을 시도한 주먹들의 행보와 무 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라임·옵티머스 막후에 광주 조폭?=광 주지역 폭력조직 담당 경찰 등은 올해 초 라임자산운용(라임)의 펀드 운용 및 판매 사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서 라임 자산운용의 배후 전주(錢主)인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충 장OB'파 관계에 주목, 동향 파악에 나선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이름을 바꾸기 전 충장OB 파 활동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 만, 경찰청의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현황' 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측이 파 악하고 있는 내용이다.

경찰들은 "김 전 회장은 광주를 떠나 수 도권으로 옮기면서도 충장OB파 조직원 들과의 관계를 이어갔으며 필요할 때마다 충장OB파 조직원 3명을 활용했다"고 전

김씨는 검·경 조사에서도 "내가 횡령한 수원여객 자금 중 수십억원을 조폭 친구A 가 훔쳐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 데, 언급된 인물도 충장OB파 조직원이다.

충장OB파 조직원들이라임·옵티머스와 관련된 행사 등에 동원된 사실을 파악한 시비하다 살해했다.

지역 폭력조직 담당 경찰은 이른바 먹 을 거리 없는 '나와바리'를 떠나 수도권 등 으로 옮겨 '업종 변경'을 시도한 조폭들의 사례로 꼽는다.

◇사라진 조폭들?=동네 나이트와 유흥가 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광주지역 조폭들은 수도권으로 활동 무대를 옮긴 지 오래다.

광주지역에서 경찰이 관리대상으로 보 고 있는 조직폭력배는 2017년 기준 국제 PJ·무등산·신양 OB·충장 OB·콜박스 등 8개 파 321명이다.

하지만 무등극장 주변을 무대로 한 국 제 PJ파, 팔레스 호텔을 중심으로 한 신양 OB, 런던약국 사거리~제일극장 일대를 주름잡던 무등산파, 광주 구시청 사거리 일대 유흥가와 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입찰

을 장악한 충장OB파 등 과거 구역(일명 나와바리)은 사라진지 오래다. 돈이 있는 곳을 찾아 다니면서 '업종변경'을 하고 있 지만 서민들 돈을 가로채고 빼앗는가 하 면, 정·관계에 줄을 대는 행태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경찰 분석이다.

주류유통, 성인오락실, 카지노, 불법도 박사이트운영, 다단계 사업, 건설업, 사 채, 상장회사 인수,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보험 사기 등 진출분야는 다양하지만 집 중 단속 탓에 세력화에 실패했고 주식까 지 눈을 돌렸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폭들이 기업 형태로 바뀌면서 호칭도 과거 '두목' '부두목' '행 동대장' 등에서 '고문' '회장' '사장' '부 장' 등의 호칭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환경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이 영광 시내를 돌며 핵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제공〉

호남권공동행동, 부실시공 의혹 3·4호기 조기 폐쇄도 촉구

한빛원전의 핵폐기물 저장공간이 조만 기 조기 폐쇄"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캠페인의 하나로, 지 난 8월 경북 월성원전 사용 후 핵연료 건 식저장시설(맥스터) 증설 방침을 세운 정 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캠페인단은 지난 24일 부산에서 출발해 경주, 울산, 울진, 대구를 거쳐 이날 영광 료 대책과 부실시공 의혹이 있는 $3\sim4$ 호 에 도착했다. 이후 대전을 지나 다음달 2

년 이상 보관해야 할 사용후 핵연료 문제 를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사용후 핵연료 문제는 국 내 모든 원전에 해당한다. 한빛원전도 1~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한빛 3·4호기의 투명하고 철저한 진상조 사가 가장 시급한 문제지만 한빛원전 1.2 호기 폐로와 사용후 핵연료 문제도 논의 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한빛원자력본부와 한빛원전민간 환경감시기구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까 지 한빛원전에 저장된 사용후 핵연료는 1 호기 1713다발, 2호기 1489다발 등 1~6 호기 모두 더해 6566다발이다. 이는 한빛 원전 저장용량 9017다발의 72.8% 수준으 로, 2029년께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 상된다. 이 기간도 한빛 3·4호기가 장기간 멈춰 서면서 늘어난 것이다.

'기아차 채용 사기' 재판…목사 혐의 부인

피해자들 엄정한 재판 요구

기아차 채용을 미끼로 수십억원을 가로 챈 목사가 재판에서 사기 혐의를 부인했 다. 피해자측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처벌 수위가 낮은 혐의를 적용하는가 하면, 공 모 여부에 대한 수사도 부실하게 이뤄졌 다며 재판부에 엄정한 재판을 요구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29 일 오후 광주지법 402호 법정에서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에 대한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기 아차 정규직 채용을 시켜주겠다며 200명 이 넘는 피해자에게 21억여원을 받아 가 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7월, 교회 신도를 통해 알 게된 피해자에게 "기아차 정규직 채용을 시켜줄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달라"고 속여 3000만원을 받아낸 뒤 2000만원을 30대 주범 B씨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000만원을 가로챈 것을 비롯, 221명에게 21억1300만원을 받아챙긴 혐 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사 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欺罔·거짓을 말 하거나 진실을 숨겨 상대방을 착오에 빠 지게 하는 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했다. 자신도 B씨에게 돈을 지급하면 채 용될 것으로 알았다는 것으로, 소개비를 부풀렸다고 기망의 의도로 평가될 수 없 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피해자측은 이날 재판부의 허락을 받아 변호인을 통해 "A씨가 주범인 B씨와 '공 동정범'으로 기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액이 20억원이 넘고 상습성이 인정되 는데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단순 사기죄로 재판에 넘 겨졌다"며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요청 했다. 재판부는 "불고불리(不告不理·검사 가 기소하지 않은 부분은 법원이 판단하 지 않는다) 원칙에, 증거조사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으로 공소장 변경 등을 요구하 는 점도 조심스럽다는 것을 양해해하달 라"며 검토 입장을 전했다. 한편, 다음 재 판은 오는 12월 17일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자동차 휠 고의 훼손 상습적이었다

타이어뱅크 상무점 대표 조사 경찰, 정황 확인…파문 확산

고객의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한 의 혹과 관련, 경찰이 해당 타이어 수리매장 〈광주일보 10월 28일자 6면〉의 상습적인 휠 훼손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면 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2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재 물손괴와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타이어뱅크 상무점 대표 A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고객의 휠을 훼손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받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히 상무점 대표 뿐 아니라 함 께 근무한 다른 직원들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관련 직원들을 수소문하는 등 추가 범행 사실과 기간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이와함께 해당 매장에서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20여 건의 진정·신고 내 용의 진위 여부 파악에도 집중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7일 해당 타이어 매 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영업장부, 신 용카드 매출전표, CCTV 영상 등을 확보 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지법도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할 듯

대법원, 5개 지방법원까지 확대

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법

원장 후보 추천제'가 광주지법에서도 시 행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사법행정자문회 의를 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 법원 선정, 판사 정기인사 등에 대해 논의했

대법원은 논의 결과, 내년 정기인사에 서 서울회생·서울남부·서울북부·부산·광 주 등 5개 지방법원까지 법원장 후보추천 제를 확대하기로 했다.이로써 법원장 후

보추천제 시행 법원은 지난해 의정부·대 구지법에 더해 총 7곳으로 늘어나게 됐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급 법원 사법 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 지로 해당 법원 판사들이 법조경력 15년 이상 판사를 대상으로 추천한 후보 중에 서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 로, 지난 2018년 최초 시행됐다. 대법원장 의 독단적 권한인 법원장 임명 권한에 일 선 판사들이 참여하도록 해 중앙집권적 법관인사 방식을 탈피하겠다는 뜻이 담겨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i

"한빛원전 사용후 핵연료 대책 마련하라"

간 '포화 상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

'핵 없는 광주·전남을 준비하는 한빛핵 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이하 공동 행동)은 29일 영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한빛원전 1~2호기 사용후핵연

일 서울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공동행동은 "산업부는 울산시민을 배제 한 채 '맥스터' 증설을 결정하는 등 10만

2호기 설계 수명이 조만간 끝나고, 사용후 핵연료 저장공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